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 권고 반영 여부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범죄피해자]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생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개선 - 사형제의 위헌성 검토 -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 집행의 지속적 중단 	<p>미반영(신중검토)</p> <p>-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p>	법무부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구속제도 개선 -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 감찰과 수사지휘 강화 -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계속 -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활동 지속 - 현행 구속수사 기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노력 강화 - 장애인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15. 7.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뢰관계인 보조인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여 실효성 증진 -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 	반영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대용감방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속초·거창·남원·영동경찰서) 대용감방 시설 및 운영 실태조사 지속적 실시 -현재 신축 사업에 착수한 속초·거창구치소의 사업기간 내 완료 -남원·영동구치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정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추진체계 강화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p>○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구분에 의한 수용률 완화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수용능력 확충 -형사사법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 	<p>○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 	반영	법무부
	<p>○다양한 교정 및 처우 프로그램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소자 취업역량 확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지속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개발 	<p>○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반영	법무부
	<p>○재범위험성 평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범위험성 평가 방안 마련 -심사유형별 평가요인 구분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화 및 개별처우 기반 강화 - 수용과밀 해소를 위한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등 신설 추진 -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 소년보호행정의 민간참여 점진적 확대 	<p>○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및 의료소년원 확대 	반영	법무부
	<p>○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약물치료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개선 - 부작용 최소화 추진 - 치료명령 가해제 적극 실시 	○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반영	법무부
	<p>○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 상 인권 보호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제도 및 적극적인 자진출국 유도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p>○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속한 난민인정 심사절차 진행 	<p>○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 -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 	<p>부분반영</p> <p>○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 부분 : 미반영</p> <p>- 취소소송제기→최종 확정판결→난민인정</p>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재신청 등 제도와 소송 절차 남용사례 급증이 예상되어 단속에 적발된 강제퇴거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난민신청 일반화 우려, 현행 출입국관리법으로도 송환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보호해제 가능	
	<p>○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p> <p>-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위법한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지원하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p> <p>- 해외사례, 국제인권기준 등을 토대로 「인신보호법」이 적용되는 ‘피수용자’ 범위의 확대 검토</p> <p>-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집행 강화 계속</p>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사상·양심의 자유	<p>○ 「국가보안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용</p> <p>-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기소</p> <p>-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p> <p>-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 교육 및 수사지휘체계 확립 계속</p>	<p>○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p> <p>-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p>	<p>부분반영</p> <p>○ 제7조 규정의 정비 부분 : 미반영</p>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범죄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상담 및 구조체계 확립 -응급위기지원 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피해가정 영·유아, 청소년 보육 지원 확대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부분반영 -해당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배상과 국가 구조 강화 -배상명령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형사조정 제도의 내실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개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구조금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이주민, 해외 장단기 거주 내국인 피해자, 인도적 체류자, 노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전문가조력권의 확대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의무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사건으로 확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제도 이행점검 및 개선 	부분반영 -피해자국선 및 진술조력인 등 점진적 확대 추진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보도에 의한 피해자 보도기준, 2차 피해 구제 방법 및 절차규정 마련 	부분반영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강화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정책추진 기반의 정비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인격권·프라이버시,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격권 및 프라이 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관찰제도의 합리적 운영 적극 추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지속적 시행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보안관찰처분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주민등록번호 개선 		부처 제안 과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해킹, 압수 수색 및 감청의 남용, 기지국수사 및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미반영 -의견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능 개선 및 일체형 전자발찌 등을 통하여 위치관리 대상자의 생활편의성 증진 -가해제 제도 활성화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수사나 재판자료 등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 -‘가해제 제도’ 활성화나 최장 부착기간 조정 등 검토 	부분반영 ○최장 부착기간 하향 부분 : 미반영 - 강력범죄 발생과 사회안전망 강화 여론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 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p> <p>-신상정보 오등록 등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노력</p> <p>-클린레코드 충족을 통한 등록면제 제도 도입 검토</p>	<p>○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p> <p>-신상공개 대상 범죄 축소, 공개대상 정보 차별제도</p>	부분반영	법무부
	<p>○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 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p> <p>-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중</p>	<p>○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 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p>	반영	행정안전부
	<p>○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p> <p>-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점검</p>	<p>○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p> <p>○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p>	<p>부분반영</p> <p>○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 : 미반영(기완료)</p> <p>-빅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6.30.)」 마련으로 안전한 비식별 조치 기준·방법·절차 등을 제시</p> <p>-비식별 정보의 공개금지 및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명시</p>	행정안전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생체정보의 수집 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p> <p>-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 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p>	<p>○ 생체정보의 수집 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p>	반영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p>○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 제공 확대</p> <p>- 국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p> <p>-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서비스 개발 활용 촉진</p>		부처 제안 과제	행정안전부
	<p>○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p> <p>- 법제처 심사 대상 법령안 중 제정·전부개정 법령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p> <p>- 국민이 알기 쉽도록 「민법」 조문 정비</p>		부처 제안 과제	법제처 법무부
	<p>○ 집회 시위 관련 법령·제도의 합리적 운용</p> <p>-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지속</p> <p>-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 담보하고,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p>	<p>○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p> <p>- 집회시위 진압방식의 신중한 운영</p> <p>-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p>	반영	경찰청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등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반론 기회 부여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추진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병행 추진 -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요건 법제화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심의시 지원 	<p>○ 실명제, 인터넷 내용 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p> <p>○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p>	반영	방송통신위원회

[가족·여성 및 아동·청소년]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청소년 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자유 보장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시할 자유 보장 	반영	여성가족부
근로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서비스 내실화 추진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청소년 다수 근로 업소·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부당노동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반영	여성가족부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확대 및 개선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가족 생활 등에 관한 권리	<p>○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p> <p>-이행법률(안) 국회통과 및 입양제도 개선을 통한 협약 비준 추진</p>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p>○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p> <p>-가족친화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p> <p>-근로자 대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인식 개선</p>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p>○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p> <p>-민간 어린이집의 공급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p> <p>-신축 방식 외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기부채납,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식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p>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p>○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p> <p>-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p> <p>-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p> <p>-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교육비 포함)</p>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여성	<p>○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한 교육 내실화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탈성매매 여성 보호·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성매매 수요 감소 위한 성구매자 교육 강화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 	<p>○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p>	반영	여성가족부 법무부
	<p>○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p>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법무부
	<p>▶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단촬영·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신고의무 이행 제고 	<p>○가정폭력 피해 신고 의무의 이행제고</p> <p>○스토킹, 데이트 폭력, 무단촬영, 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p>	반영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p> <p>-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p> <p>-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p>		부처 제안 과제	
	<p>▶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p> <p>-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인프라 확대</p> <p>-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p> <p>-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p> <p>-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p>	<p>○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p> <p>-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관련 법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특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p>	반영	
	<p>▶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p> <p>-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p> <p>-전전담의료기관, 의료비 지원확대,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동행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p> <p>-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 관리, 운영실태 조사 등 정기적 종합평가 실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p> <p>-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지원 및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p>		부처 제안 과제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속적 확대 및 신속한 형사사건 법률지원 도모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확대 			
	<p>▶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재사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강 명령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료를 병행하는 근본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 -구금 이후 출소한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속 추진 		부처 제안 과제	
	<p>○성희롱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정책 추진 -성희롱 실태조사 추진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반영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성별통계 활성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성인지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p>○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반영	여성가족부
	<p>○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교육 실시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어업도우미 제도 내실화 및 가사도우미 제도 신설 추진 		부처 제안 과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p>○여성폭력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감독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추방주간에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실시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 	<p>○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피해자(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지원강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p>○여성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의 선동 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p>	반영	여성가족부,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모·부성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p>○모·부성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 	반영	여성가족부
	<p>○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대표성 제고 -위원회 관리 	<p>○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중앙·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도입 	<p>부분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목표제는 권한 없어 미반영, 중앙·지자체 여성공무원 목표제는 반영 	여성가족부
	<p>○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매체(인터넷, 라디오광고 등)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강연 등 추진 -차별경험 없이 신청 가능한 한부모 온라인 신청 추진·홍보 강화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 강화 	<p>○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 해소</p>	반영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아동· 청소년	<p>○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p>○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p>○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및 피해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지원 및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강화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 CCTV 관제 강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시범학교 확대 및 학교 신·개축 시 CPTED 적용 의무화 -‘SOS국민안심서비스’ 확대 -초등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 보급확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사회복무요원, 학교보안관 등) 운영 확대 및 내실화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 도입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화해 도모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민간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분쟁 조정 및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 대책 수립 			
	<p>○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 확충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추진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p>○가정, 학교 등에서의 각종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p> <p>○학대, 성범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방안</p>	반영	보건복지부
	<p>○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권역별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을 통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예방 -성매매 알선 여자청소년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지급기준 완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의 주된 통로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추진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위한 대책	반영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CYS-Net) 운영 강화</p> <p>-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p>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p>○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 기능 강화</p> <p>- 지역 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p> <p>- 비행 예방 교육 역량 강화</p>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p>○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p> <p>- 인터넷 중독 상담</p> <p>-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및 중독 위험 수준별 치유 서비스 지원</p> <p>-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일명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p>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p>○ 아동 유기, 불법 입양(아동 매매) 등 대책 마련</p> <p>-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p> <p>- 출생 신고 제도 관련법 개정 및 처벌 강화 검토</p>	<p>○ 아동 출생 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p> <p>○ 아동 유기, 불법 입양(아동 매매), 학대, 건강보험 미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출생 신고 제도 개선</p>	반영	통계청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p> <p>- 보호대상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p>	<p>○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p>	<p>부분반영</p> <p>- “<u>보호대상아동</u>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로 과제 명 변경</p>	<p>보건복지부 여가부</p>
	<p>○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p> <p>- 보육 서비스 질 개선 정책과 영유아 수 변동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육지원 확대정책 지속 추진</p>	<p>○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p>	<p>반영</p>	<p>보건복지부</p>
	<p>○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마련</p> <p>-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p>	<p>○ 피학대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 확보</p>	<p>부분반영</p>	<p>여성가족부</p>
	<p>○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부여</p> <p>-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및 맞춤형 지원</p>	<p>○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p>	<p>반영</p>	<p>여성가족부</p>

[교육부 소관 과제]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체벌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교육 현장에서의 충실한 준수 추진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준수 홍보 - 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교육을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여건고려 단계적 무상교육확대 지속추진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 고교 무상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별, 지역별 교육 격차의 해소 	반영	교육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평가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평가제 현장안착 - 학생 평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구성원 역량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통합지원 체제 구축·운영 - 학교 밖 지원 활성화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지원 강화 - 기초학력 지도·지원역량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고교학비·급식비·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학용품비·부교재비·교과서비 등 지원 - 현재 3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적기 지원 - '18년부터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부교재비 등 지원단가 인상 및 학교급별 단가 차등화하여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p>○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별, 지역별 교육 격차의 해소</p>	반영	교육부
	<p>○ 장애인의 교육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학교 적응 지원 -진로·직업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강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온라인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교육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인터넷 포털·모바일 웹 운영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인터넷사이트 이외의 시청 접근권 확대 -실용영어 활용 능력 내재화를 위한 학교 현장 활용도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이전·폐쇄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보호제도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강화 추진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평가제도 내실화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학교 미학력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확대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대상 문해 교육 등 기초 학습권 보장 -문해교육 수혜 대상자 확대 및 농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문해교육 지원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중점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내실화 -꿈과 끼를 살리는 고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	반영	교육부
		○학교교육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 내용을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p>미반영</p> <p>-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현행 법상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인권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위원회는 성격, 지위, 역할 등 불분명하며,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교과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원양성·임용·배치·연수, 교육여건 개선, 대입제도 등 정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육부 중심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p>	교육부
근로의 권리	<p>○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지원 등으로 취업희망 학생의 역량 강화 -미취업자는 고용노동부 고졸취업인턴사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지원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건강· 보건 및 환경권	<p>○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p> <p>-학교급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 및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에 대한 급식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화</p> <p>-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 강화</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p> <p>-초·중·고별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p> <p>-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흡연·음주 예방 교육 강화</p> <p>-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여성	<p>○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p> <p>-각급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내실화</p>	<p>○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p>	반영	교육부
아동· 청소년	<p>○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p> <p>-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 확대</p> <p>-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p> <p>-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p> <p>-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방안 마련 및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보급</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지식 위주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p> <p>-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지속 추진</p> <p>-지식위주의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p>	<p>○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놀 권리 보장</p> <p>○극심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p>	<p>부분반영</p> <p>○극심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중압감을 해소 방안 부분 : 미반영(기시행)</p> <p>-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행,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 평가 도입 등 입시경쟁에 따른 중압감 해소를 위해 대입 간소화정책 및 영어 절대평가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p>	교육부
	<p>○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p> <p>-학교단위 위(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속 확충</p> <p>-교내 학생 사례 관장 협의체인 학교상담위원회, 학교상담지원단 구성 및 운영</p> <p>-Wee 센터 내 외부 상담지원 봉사 및 재능나눔기부를 통해 지역병원, 사회적 기업 등 외부자원과의 연계 지원 활성화</p> <p>-Wee 센터 전문상담인력 및 임상심리사 확대, 센터 자문 의사 지정을 통한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p> <p>-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 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Wee프로젝트 설치·운영 근거 및 행·재정적 지원 명시 -정신적 고위기군 학생 지원을 위한 위(Wee)센터 전문인력 보강, 위(Wee)센터 자문 지정, 매뉴얼 제작 등 정신의학적 지원 기반 강화 추진 			
	<p>○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및 피해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지원 및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강화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 CCTV 관제 강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시범학교 확대 및 학교 신·개축 시 CPTED 적용 의무화 -‘SOS국민안심서비스’ 확대 -초등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 보급확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사회복무요원, 학교보안관 등) 운영 확대 및 내실화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 도입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화해 도모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민간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분쟁 조정 및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대책 수립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p> <p>-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을 포괄하는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지속추진</p> <p>-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 지정</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p> <p>-학교·학급별, 수준별, 핵심요소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 개발·보급</p> <p>-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p>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p>○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p> <p>-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관리체계 확립</p> <p>-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추진</p> <p>-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p>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책 확대	반영	교육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미반영 ○ 공교육 부분 : 의견 없음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장애인	<p>○장애인 교육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일반학교 장애 이해교육 강화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 -일반학교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p>○장애인 교육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특수교육교원의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 -일반학교 교사와 직원 그 밖의 교직원, 교육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p>부분 반영</p> <p>○보조기구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부분 : 미반영</p> <p>-의견 없음</p>	교육부
외국인·이주민	<p>○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p>○이주노동자 및 무국적 자녀의 출생 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p>	반영(교육권 부분)	교육부
재외동포	<p>○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취업 해외동포의 자녀가 학교 전·입학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학교 입학 안내 자료(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비치 	<p>○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 정책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반영(교육권 부분)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 경찰교육기관 내 관련 교육과정 지속적 운영 - 성적소수자를 주제로 한 사이버 강좌 제작 추진 - 외부 강사 인력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발달단계에 있는 유·초·중등 학생은 자아 및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관련 내용은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음 -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선행과제로 해결될 필요 있음 	교육부
북한 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 입국초기 적응교육 강화 -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예비학교 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력체제 활성화 등 종합 지원 체제 강화 -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탈북청소년 멘토링 -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 		부처 제안 과제	교육부 통일부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권교육 ▶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질 관리 - 개발된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수시 수정·보완 체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심의 시 인권요소 반영과 모니터링 강화 	부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에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보급 부분 : 미반영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 학교현장에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교재 (교과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개발 보급	- ‘인권교육 교재’는 교과서 外 교육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을 담당하는 교육 부가 추진하기가 부적절	
	○ 학교 인권교육 ▶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교원 직무연수에 인권교육 포함,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부분반영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부분 : 미반영 - 여성가족부로 소관임	교육부
	○ 학교 인권교육 ▶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일반학교 교사와 직원, 그 밖의 교 직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반영	교육부
	○ 학교 인권교육 ▶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 관련 학과 개설 유도 - 인권 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 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부분반영 ○ 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부분 : 미반영 (기시행)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4년제 대학 학생처(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당부('16.9.8)</p> <p>*대학생 인권교육·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부모교육 실시 협조 요청 등</p> <p>-대학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대책*을 마련하여 대학에 통보('16.5.12)</p> <p>*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년 2회 이상 실시 권고, 대학내 모든 집단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여부 재검토, 인권관련 교양 과목 개설 권장</p> <p>-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 개정 대학통보('16.3.3)</p> <p>*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 행사 관련자는 행사 전 반드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p>	
	<p>○학교 인권교육</p> <p>▶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파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p> <p>-학교 내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의 내실화 방안 추진</p> <p>-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규칙의 효율적 운영 안내 및 홍보 추진</p> <p>-인권 관련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p>	<p>○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권고'의 지속적 이행과 국가인권위원회 - 각 시도교육청 - 인권단체 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p>	반영	교육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p>○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p> <p>-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사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 체험처 운영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강화</p> <p>-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 대학생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지원</p> <p>-유엔, 유네스코, OECD 등 교육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이행 네트워크 확대</p>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반영	교육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 금지	<p>미반영</p> <p>-관련법률에 일정한 경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교의 선택을 위한 무분별한 전학요구는 취지와 달리 악용될 우려</p>	교육부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근로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 강화 -기간제 및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제 운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 유도 노력 지속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대책 지속 모색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및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부분반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부분 : 미반영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관리체계 개선 등 처우 개선 과제 추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종사자 특성에 맞는 보호대책 추진 -법적 신분 판단보다는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제법적 보호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확대 	부분반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단결권 인정 부분 : 미반영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판단을 받은 자로서 입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고용서비스 강화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 제고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p>○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채용분야 연령차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별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시정조치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p>○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확립을 통한 근로조건 전반적 개선 -영세 사업장의 부담, 감독행정의 능력을 고려한 보호방안 검토 -'15. 9. 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적용확대 방안 검토 	<p>○「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p>부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9.15. 노사정대타협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진행 중임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동 과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과제 포함에 수용하기 곤란하나, 일부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이라면 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과제 포함 가능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p> <p>-비공식부분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 및 보호입법</p> <p>-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p>	<p>미반영</p> <p>○비공식부분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 및 보호입법</p> <p>-근로기준법 체계상 맞지 않고, 별도 보호입법 적절치 않음</p> <p>○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p> <p>-가사노동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어려움</p>	고용노동부
		<p>○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p> <p>-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 근로자, 가사 사용인,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종사 근로자)와 해외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 마련</p>	<p>미반영</p> <p>-소규모 공사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 등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업주 신청시 임의가입을 통한 보호 가능</p> <p>-일부 사업 등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의 어려움, 적용·징수 및 업무상 재해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당연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임</p>	고용노동부
		<p>○근로감독관 확충 및 실질적 근로감독 실현</p>	<p>미반영</p> <p>-행정안전부 등 타부처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아님</p> <p>※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통한 추진 검토</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 시간 등 적용 검토</p> <p>-농림업 등 1차 산업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검토</p>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p>○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보호</p> <p>-최저임금 관련 제재 강화</p> <p>-합리적 최저임금 결정</p> <p>-사업장감독 강화</p> <p>-최저임금준수 인식 강화</p>	<p>○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p> <p>-최저임금액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치 수립</p> <p>-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p>	<p>미반영</p> <p>-일률적 목표치 설정 추진 어려움, 결정 구조 개선 신중 검토 필요</p> <p>※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추진</p>	고용노동부
	<p>○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p> <p>-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p> <p>-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체험교육 강화</p> <p>-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p> <p>-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p> <p>-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재해 조사 역량 강화</p>	<p>○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p> <p>-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p> <p>-「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교육 강화</p> <p>-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p> <p>-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p> <p>-산업재해보험 승인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분담 등 제도개선</p>	<p>부분반영</p> <p>○산업재해보험 승인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분담 등 제도개선 부분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수정 수용</p> <p>-산재승인심사위원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옳은 명칭이며 이미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기완료)</p> <p>-입증책임 ‘분담’을 ‘완화’로 부분수용 (입증책임 일반원리, 외국사례 고려)</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시행</p> <p>-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p> <p>-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 강화</p>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p>○부당한 근로자 감시, 개인정보보호 침해 근로환경 개선</p>	<p>미반영(기완료)</p> <p>-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p>	고용노동부
		<p>○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p>	<p>미반영</p> <p>-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파견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여건 고려 없이 사전적, 획일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를 정책방향으로 정할 사항은 아님</p> <p>-현재 파견과 도급의 구별은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 고용노동부·법무부·검찰 공동)을 통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이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음</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 책임강화</p> <p>-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을 강화</p>	<p>○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강화</p>	반영	고용노동부
	<p>○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대책</p> <p>-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고용촉진정책 추진</p> <p>-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p> <p>-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p>	<p>○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대책</p> <p>-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명확화</p> <p>-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p> <p>- 사용자의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복원</p> <p>-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고용촉진정책 추진</p>	<p>부분반영</p> <p>○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명확화 부분 : 미반영</p> <p>- 일률적 입법화 비현실적, 다른 논란 발생 우려</p>	고용노동부
		<p>○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p>	<p>미반영</p> <p>- 기완료</p>	고용노동부
		<p>○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대책 마련</p> <p>-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p>	<p>미반영</p> <p>-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접 고용 등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여력 등의 현실을 볼 때 공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할 가능성이 높아 300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 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p> <p>-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p> <p>-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제고</p> <p>-불합리한 임금차별 해소</p> <p>-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p>	<p>○여성근로</p> <p>-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p> <p>○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p>	반영	고용노동부
	<p>○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p> <p>-청소년 다수 근로 업소·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p> <p>-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p> <p>-부당노동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p>	<p>○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p>	반영	고용노동부
	<p>○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p> <p>-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p>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근로3권	<p>○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p> <p>-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단체교섭 지도·지침 마련 등 적극 지도·감독</p> <p>-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지도감독, 형사처벌 강화</p>	<p>○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p> <p>-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p>	반영	고용노동부
	<p>○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p> <p>-대학, 교수,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인 입장 및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여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모색</p>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p>○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p> <p>-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p> <p>-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점 개선</p> <p>-조정전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 등의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p>	<p>미반영</p> <p>○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 부분</p> <p>-노조법 제정시 입법적 해결을 위해 규정된 것</p> <p>○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부분</p> <p>-정당한 쟁의행위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책임 면제되므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해, 가압류 문제 발생하지 않음, 또한 급여 1/2이상 압류 금지됨</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조정정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 등의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 부분</p> <p>-국가의 개입 과도하지 않음,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p>	
		<p>○근로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p> <p>-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완화</p>	<p>미반영</p> <p>-직무 공공성 등 감안</p>	고용노동부
		<p>○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p> <p>-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 파악 및 개선안</p>	<p>미반영</p> <p>-소수노조의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등 단일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p>	고용노동부
	<p>○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p> <p>-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 계획 수립</p>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p>○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p> <p>-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p>	<p>○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p> <p>○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p>	<p>부분반영</p> <p>○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 부분 : 미반영</p>	고용노동부
	<p>○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p> <p>-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p> <p>-출퇴근 재해 도입</p>	<p>○다양한 근로형태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출퇴근재해 보호위한 제도 개선</p> <p>○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p>	반영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여성	<p>○여성근로</p> <p>-성별임금격차 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p> <p>-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p>	<p>○여성근로</p> <p>-성별임금격차 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p> <p>-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p>	반영	고용노동부
		<p>○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p>	<p>미반영</p> <p>※이주여성 인권 보호 정책 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정책에 포섭</p>	고용노동부
	<p>○모·부성권 강화</p> <p>-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p> <p>-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p>	<p>○모·부성권 강화</p> <p>-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p> <p>-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p>	반영	고용노동부
장애인	<p>○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p> <p>-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강화</p>	<p>○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p> <p>-고용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p>	반영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장애인 노동권 보장</p> <p>-장애인 고용인식 개선</p>	<p>○장애인 노동권 보장</p> <p>-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p> <p>-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확대</p> <p>-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강화</p>	<p>미반영</p> <p>○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부분</p> <p>-“장애인 고용인식 개선”으로과제 변경 요청</p> <p>○정신장애인 등 근로지원제도 확대 부분</p> <p>-기확대 운영 중이며 근로지원인 적용이 가능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수요 미흡</p> <p>○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등</p> <p>-그간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장애인고용 부담금 구간별 차등 확대 등 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온 바 있으며,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 불요</p>	고용노동부
노인	<p>○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p> <p>-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p>	<p>○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p>	<p>○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부분 : 미반영(의견 없음)</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p> <p>-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 마련</p> <p>-노인근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p> <p>-장년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세스 개선</p>	<p>○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p>	반영	고용노동부
외국인·이주민	<p>○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p> <p>-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p> <p>-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p> <p>-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p> <p>-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p>	<p>○임금체불 방지대책 강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장금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소화</p> <p>○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재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대 징수 기준 마련</p> <p>○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p>	<p>부분반영</p> <p>○임금체불보증보험의 보장금액 확대부분 : 미반영</p> <p>-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보험 가입률이 저하되어 외국인근로자 혜택이 감소될 우려</p> <p>○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부분 : 미반영</p> <p>-현재 합헌결정(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을 고려,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판시), 대신 미신청 출국자에 대한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p>	고용노동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고용허가제 관련 부분 : 미반영</p> <p>-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특정 사업주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p> <p>-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5인미만 사업장 제외)</p> <p>-주거 및 식대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사항(다만 표준계약서 제도 개선 통해 권익보호)</p>	
	<p>○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관리 지속</p> <p>-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p>	<p>○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p> <p>-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조화)</p> <p>-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p>	부분반영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p>○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p> <p>-직업역량 강화 및 탈북민 적합 일자리 지속 발굴</p> <p>-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내실화</p>		부처 제안 과제	고용노동부 통일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반영	고용노동부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 국내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연계하여 조약 비준 추진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비준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에 대한 구체적 비준계획 수립 및 비준 	<p>부분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원 등 관련하여 문제있고, 비준 위한 노력 지속 중이나 일부 조항이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시간 필요함, 과제명을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노력’으로 수정 	고용노동부

[장애인]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시설에서 인권보호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 강화 대책 마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지킴이 활동 활성화로 외부감시체계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인권침해 지원구조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인권실태조사 실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시설보호 아동의 진정권 보장 강화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반영	보건복지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정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제공인력 관리방안 마련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추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 지원사업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정책 예산 확충, 정책 수립 -여성장애인 모성권·건강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부분반영 ○장애관련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부분 : 미반영(기완료)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인관련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장애인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통계 연구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반영	보건복지부
	○장애인 접근권 보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확대 방안 강구 -사법예의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권 보장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활성화 -인터넷에서 쉬운 언어, 음성지원 제공 등 정보접근권 강화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투표소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 대상 홍보 강화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 조치 마련 -개인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 ○사법예의 접근 보장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활성화 : 반영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상 정보접근권 강화 : 반영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 조치 마련 : 미반영 -의견 없음 【보건복지부】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 : 반영 [법무부] ○사법예의 접근 보장 : 반영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장애인 사회통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 정책 강화 -장애인등급제 문제점 개선 검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p>○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p>반영</p> <p>○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부분에 반영</p>	보건복지부
	<p>○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 주기적 점검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p>○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p>○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p>○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호, 확대</p>	<p>부분반영</p> <p>○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부분 : 미반영(의견 없음)</p>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장애인 재난대책 -재가 장애인 재난대책 	<p>○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정책 마련 	반영	보건복지부
	<p>○장애인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p>○장애인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반영	보건복지부
	<p>○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p>○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p>부분반영</p> <p>○성인 장애인 부양의무자 삭제부분 :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기준 기완화 	보건복지부
	<p>○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p>○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당사자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p>【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학대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당사자 교육 : 반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반영 <p>【법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미반영 (의견 없음) 	보건복지부,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p> <p>-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p> <p>-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3) 이행</p>	<p>○협약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 미반영</p> <p>-국내상황 검토 필요</p> <p>○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행 : 미반영</p> <p>-기 완료</p>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및 보건·건강]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생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 예방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자살 관련 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의 근본적 원인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교육의 강화 	반영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존중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존중문화조성 홍보 및 캠페인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안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미반영 -기완료 제외요청	보건복지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의 선정·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보장제도 선정·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의 주기적인 계측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 : 미반영(기완료)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p> <p>-사회보험 신규가입률 제고</p> <p>-대국민 사회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p>	<p>○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p>	미반영	보건복지부
		<p>○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확대</p>	<p>미반영(국민연금 부분)</p> <p>-기완료. 특수고용직근로자는 이미 국민연금 가입대상(지역가입자)이고,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장 가입자로는 가입 곤란</p>	보건복지부
		<p>○치매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요건 중 연령기준 완화</p>	미반영(의견 없음)	보건복지부
		<p>○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제공 확대</p>	<p>미반영</p> <p>-기완료.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음</p>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긴급복지지원제도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사회보장 강화	미반영 -긴급복지제도는 국적취득 예상, 내국인과 연결성, 사회 기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일부 외국인*에 한해 지원대상 -내국인 생계곤란자와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국가재정 상황 악화 및 전체 국민의 부담 가중 문제 발생 우려	보건복지부
건강· 보건 및 환경권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제도 시행 -비급여 진료비용 등 코드 표준화 연구용역 추진	○질환중심 보다 비용중심의 보장 검토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정보 공개 및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반영	보건복지부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마련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하여 낙도 등 취약 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해 시행중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 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 개발	반영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정립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가족 지원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p>○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지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환자안전기준과 연계, 환자안전기준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 지표(‘환자안전지표’) 개발 -개발된 환자안전지표를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환자안전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p>○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p> <p>○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 및 공개</p>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의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 -현 상황에서 환자안전수준의 평가 및 공개를 공식화한다면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환자안전 수준 측정 등 활동 위축 우려가 큼 <p>※‘의료기관 인증제도’ 확대를 통한 환자 알권리 확대 모색</p>	보건복지부
	<p>○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이슈, 국민의 관심의 많은 질환 등에 대해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항목, 대상기관 등 수술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계획(안) 마련 -정보공개에 필요한 항목(상병별, 코드, 입원일수, 진료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구축 -중증도 보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종별·기관별 진료비, 입원 일수 등 제공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 및 활용 	○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진료비 공개 확대	반영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분담제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평가자료의 사전 상담기능 강화 -세계최초 허가 국내개발 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반영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 제도 개선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득하위 50%(소득 2~5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 의료기관 기능 회복, 지역의료 서비스 연계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질환의 적정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인권차원의 접근은 맞지 않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및 제품안전성, 안전권]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기준 설정·관리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전국 주요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노출실태 5년 단위 조사 -인체노출 및 위해도 평가를 통한 관리항목 지속확대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20년 GAP 전체 농가의 12% 인증 및 소비자인지도 77% 목표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부처 제안 과제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안전성 강화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 지속 강화 -백신 개발 및 지원 사업 지속 확대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품목 확대 -주요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필요 		부처 제안 과제	해양수산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 등 관리의 공공성 제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플랜 수립·운영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중심의 먹거리 안전정책 강화 		부처 제안 과제	식약처
	<p>○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17. 8. 9.)에 따라 적극적인 구제 추진 	<p>○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p>	반영	환경부
	<p>○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건강·보건 및 환경권	<p>○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귀질환 등 환자치료를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국내 미허가 의약품 특례 공급 -필요시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요청 	<p>○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p>	반영	식약처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마약류 유통관리체계 강화 및 오남용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마약류 유통 관리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마련, 오남용 모니터링	반영	식약처
	<p>○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 평가 및 안전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 평가 및 안전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	반영	식약처
안전권	<p>○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복지)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국정과제 55	행정안전부
	<p>○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 (재난조사.치료) '18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18년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56	행정안전부

[문화·예술 및 과학]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질적 향상 추진 -시·청각 장애인용 TV 편의 기능 개선 추진 및 저소득층 보급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민간협력을 통한 정보접근성 준수를 위한 홍보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사장 임명 절차 개선 -사주나 대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민영방송의 편집권 및 독립성의 확보, 편집위원회 구성방안 개선 	미반영(의견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기반 구축 -도서관 설립·육성지원 등 -박물관 설립·육성 지원 등 -도서관 확충 및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연중무휴 운영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 향유 지원 강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p>○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 -미디어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교육 실시 -학교교육 현장의 NIE 수업 지원 -사회교육 차원의 NIE 제공 -뉴스 리터러시 교육 기반 구축 -NIE 확산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자료 확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특히 미디어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교육 실시	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p>○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문화향유권 제고 프로그램 지원 -문화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p>○예술인 창작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p>○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실시 -정책 추진체계 마련 -정책 사업 추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간 문화 균형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지속적인 지역 문화시설 확충·운영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발전을 위한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지원	○문화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와 스포츠 클럽 지원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영화) 기 제정된 표준계약서(4종: 근로/상영/투자/시나리오) 중 2종(근로/시나리오) 보완, 영화발전기금 지원신청 시 사용 의무화(근로/투자)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 제작·투자·방송·상품유통 등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 수익배분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만화) 만화·웹툰 및 2차적 저작물 표준계약서 보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공정계약 캠페인 실시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청소년연습생)의 전속계약 체결 시 적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여성	<p>○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여성문화예술인의 경력 단절 해소 및 가사·육아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지속 운영 및 추가 개소 추진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	<p>○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스포츠 권익센터 운영 -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p>○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업계의 자율적 노력 위한 정책적 유도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자질 함양 교육·소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 허용 기준 마련 		부처 제안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장애인	<p>○장애인의 문화권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숙박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관광지에서의 접근성 강화 -장애인 교육·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p>○장애인의 문화권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관광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확충, 호텔 및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 등 문화관광지에서의 접근성 강화 조치 -장애인의 여행·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p>부분 반영</p> <p>○디지털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 조치 : 미반영(소관 아님)</p> <p>-방통위 의견 필요</p>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이주민	<p>○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와 지역주민 간 교류 지원 및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지역문화기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등 교류 네트워크 구축, 주요활동 결과 축적 	<p>○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화지원 사업 확대 추진</p>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환경권]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건강· 보건 및 환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 -국민 체내 환경유해인자 노출수준을 파악하고, 그 조사과정에 대한 표준화 및 정도 관리 수행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 -환경오염 민감계층, 취약지역의 노출,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보완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 추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전국 확대 추진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보건 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종합병원, 대학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의 확대를 위한 업종확대 실시 -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의 지속적 관리 역량강화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기후변화 적응정책 주류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적응산업 지원·육성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의 과학적 기반 조성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개선 및 지속적 홍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유도 -전 주기적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상시 지원 -사용단계 에너지사용 생산재의 작성지침 개발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p>○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부처 제안 과제	환경부
		○ 환경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등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책	미반영(의견 없음)	환경부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이행	미반영(의견 없음)	환경부
		○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교육 강화	미반영(의견 없음)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관과제]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거주·이전의 자유	<p>○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p> <p>-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속적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편차 해소 및 배차 대기시간 단축 노력</p> <p>-국비지원을 통해 공공형 택시를 보급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18년~, 5천만 원/시·군)</p> <p>-공공형 택시 도입에 따른 노선버스 적자 등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노선의 효율화를 추진('19)</p>		부처 제안 과제	국토교통부
	<p>○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p> <p>-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p> <p>-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p>		부처 제안 과제	해양수산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p> <p>-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반영	국토교통부
	<p>○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p> <p>-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p>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반영	국토교통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을 '16년 12.5만호 등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준공) 추진 중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노후 주택 등을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고령자, 대학생에 공급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반영	국토교통부
	<p>○주거안정을 위한 저리의 전월세임차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정상 추진 -전월세 자금의 저리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강화 		부처 제안 과제	국토교통부
	<p>○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속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확대 		부처 제안 과제	국토교통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주거기준 정립	<p>미반영(기완료)</p> <p>-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을 이미 설정·공고하고 있음</p>	국토교통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절차 강화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에 유의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대규모 개발→중·소규모 개발), 택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택지개발촉진법 목적 달성 및 9.1대책*('14.9.1) 후속조치로 법 폐지 추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이미 규정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보호(의견 없음) 	국토교통부
장애인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구축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 	미반영(의견없음)	국토교통부

[양심적 병역거부·군인권]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영 및 징총거부자 대체 복무제도 편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영 및 징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미반영(신중검토)	국방부
권익 피해의 구제 위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및 병영문화 개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규모 확대 -병영문화개선을 통해 장병 기본권 보장 추진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상황을 수시점검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 ○징계 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 환경 개선 ○여군인권향상 개선방안 마련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 금지 	<p>부분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 : 미반영 -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국방부 소관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음(인권위는 정부 계획의 담당 부처로 포함되지 않음) ○징계 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 : 미반영(의견 없음) 	국방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군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의 인권의식 함양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 방안 검토	미반영 -군사법원은 그 법적특수성이 인정될 필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위협이 강도가 높아지는 안보적 상황을 고려, 군 조직의 특수성 고려	국방부
건강·보건 및 환경권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시범운영 등 장병 의료접근성을 보장 -군 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장병의 정신건강을 증진 -장기군의원,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단계적 확보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확보 -민간병원과의 의료협력 강화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	반영	국방부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	미반영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 조직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으로, 동성애 자체를 차별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국방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군대 내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관계관 교육 지속적 실시 -군 내 효과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콘텐츠 및 교재 제작·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대 내 대상별, 진급 주기별 인권교육 	반영	국방부

[노인·고령자]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신체의 자유	<p>○보호시설에서의 인권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 강화 대책 마련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의 활성화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인권침해 지원구조체계 구축 및 실효성있는 인권실태 조사 실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시설보호 아동의 진정권 보장 강화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반영	보건복지부
노인	<p>○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p>○농지연금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 및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농업인 회의·교육 시 현장설명회 실시,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밀착형 홍보 추진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연금 가입 시 주요 의논대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상담 강화 		부처 제안 과제	농림축산식품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p> <p>-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홍보 강화</p> <p>-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 마련</p> <p>-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p>		부처 제안 과제	보건복지부
	<p>○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p> <p>-시설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대책 마련</p> <p>-인권교육, 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인권보호 교육 및 인권보호 제고</p>	<p>○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p>	반영	보건복지부
	<p>○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p> <p>-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p>	<p>○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 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p>	<p>부분 수용</p> <p>○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 미반영</p> <p>-소관아님(고용노동부 소관)</p>	보건복지부
	<p>○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p> <p>-기초연금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p>	<p>○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p>	반영(공적연금 개선 부분)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미반영 -돌봄기본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 정기적 안부를 확인하는 단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 위한 정책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교육 및 홍보	미반영 -추진과제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과제 담당부서 특정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사업에 따라 건강, 연령기준이 있으나 이는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

[외국인·이주민 및 재외동포·난민]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외국인· 이주민	<p>○‘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 및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p> <p>-연도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이행</p> <p>-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 간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한 유관부처 연대 및 협조강화</p>	○다문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 방안 모색	미반영	법무부
	<p>○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p> <p>-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 조사 병행 실시</p> <p>-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p>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p>○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지속</p> <p>-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대상 확대</p> <p>-귀화·영주 신청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강화</p> <p>-재정착난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NGO와 연계하여 취업·육아·취학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공</p> <p>-야간반, 주말반, 온라인 화상교육 및 이동교실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p> <p>-외국인 사회통합 활성화를 위해 비자관련 법률, 취업·창업, 보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p>	<p>○사회통합정책 대상 확대</p> <p>○외국인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창업, 보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p>	반영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이민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체류 허가 등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확대 -이민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대학교의 학부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과정 확대 -이민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교육, 재난안전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부처 제안 과제	여성가족부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부처 제안 과제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실시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기능 강화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반영(성매매피해자 부분)	여성가족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p> <p>-‘다누리콜센터’ 운영 지원</p> <p>-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상담,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p> <p>-이주여성 폭력 피해 재발 방지</p>	<p>○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기능 강화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p>	반영(가정폭력, 성폭력부분)	여성가족부
	<p>○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p> <p>-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p>	<p>○이주노동자 및 무국적 자녀의 출생 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p>	<p>[법무부]</p> <p>○교육권 부분 : 반영</p> <p>-이주노동자 및 무국적 자녀’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용어인 ‘이민배경 아동’으로 수정</p> <p>[보건복지부]</p> <p>○보육권 부분 : 미반영</p> <p>-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임</p> <p>-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육사업안 내에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p>	<p>법무부</p> <p>보건복지부</p>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또한 영유아에 대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기준 및 대상이 상이할 경우 영유아의 부모(수혜자), 지자체,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간의 정합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p> <p>○건강권 부분 : 미반영</p> <p>-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혜택 강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음</p>	
	<p>○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및 합리적 운영</p> <p>-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p>	○여권발급거부기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합리적 운영	반영	법무부
		<p>○인종 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시행</p> <p>○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p>	미반영(의견 없음)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재외동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및 구소련 체류자격(F-4) 부여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및 구소련 체류자격(F-4) 부여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업 계층 취업 부문 고려)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반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의 사회통합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 사회통합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반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의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반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 취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취득 지원 	반영	보건복지부
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 심사체계 고도화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국가정황 연구조직 운영('18년 상반기)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 전담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 기준 수립,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제도 개선,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내 장기 체류 방지방안 마련 	부분반영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 : 미반영 -의견 없음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p> <p>-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p> <p>-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p>	<p>○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 가족결합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p> <p>○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p> <p>○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p> <p>○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검토, 사법제도, 문화, 언어 등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실시</p> <p>○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p>	<p>부분 수용</p> <p>○인도적체류허가자 기본권보장 부분 : 미반영(기시행)</p> <p>-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심사기준 마련은 완료된 과제</p> <p>-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포괄적취업허가 제도는 이미 시행</p> <p>-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p> <p>○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 : 미반영</p> <p>-불필요한 장기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보호외국인 연장승인 상신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고 질병치료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해제하고 있으며 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보호외국인이 행정소송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할 경우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가</p> <p>○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 : 미반영</p> <p>-통역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과제 추진이 불투명</p>	법무부

[성소수자, HIV·AIDS 감염자]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p>○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안</p> <p>- (예비)의료인·종사자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p> <p>- 관련학·협회에 ‘HIV 감염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협조 요청</p> <p>-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p>	<p>○ HIV / AIDS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p> <p>-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 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의료현장 적용방안</p> <p>-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안</p> <p>-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p> <p>-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p> <p>- HIV/AIDS 교육 및 캠페인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p> <p>-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방안 마련</p>	<p>부분반영</p> <p>○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예방 등 : 반영</p> <p>○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 : 미반영</p> <p>- 국내 HIV 검사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p> <p>○나머지 : 미반영(기완료)</p>	보건복지부
	<p>○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p> <p>- 경찰교육기관 내 관련 교육과정 지속적 운영</p> <p>- 성적소수자를 주제로 한 사이버 강좌 제작 추진</p> <p>- 외부 강사 인력풀 구성</p>	<p>○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p>	<p>[경찰청] 반영</p> <p>[보건복지부] 미반영(기완료)</p> <p>- 현재 의료기관 인증기준<환자권리준중>에 따라, 의료기관 직원들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할 것 등),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p>	경찰청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한센인 인권보호 방안</p> <p>-한센인 생활지원 대상 확대</p> <p>-호스피스 제도 신설</p> <p>-고향찾기 사업 등 한센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과 고향 주민들의 인식개선</p>	<p>미반영</p> <p>○호스피스 제도 신설</p> <p>-별도 한센인만을 위한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호스피스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p> <p>○나머지</p> <p>-기완료</p>	보건복지부
		<p>○ B형 간염인 인권보호 방안</p> <p>-고용상의 차별 해소</p> <p>-공익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개선</p>	미반영	고용노동부
		<p>○ 결핵 환자 인권보호 방안</p> <p>-환자의 보호와 권리를 고려한 결핵 예방법의 내용 정비</p> <p>-복약확인치료사업(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의 실효성 제고</p> <p>-입원 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p> <p>-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p> <p>-차상위계층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확충</p>	<p>미변영</p> <p>○결핵예방법의 내용 정비</p> <p>-현행법은 국가차원의 권리와 환자의 보호, 권리를 고려하고 있음</p> <p>○입원 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p> <p>-치료에 비순응하거나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지역사회내 전파 차단을 위해 입원명령 및 격리치료를 통한 환자 관리가 불가피함</p>	보건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핵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 -지역사회내 전파 차단을 위해 입원명령 및 격리치료를 통한 환자관리가 불가피 ○나머지 -기완료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	미반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움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북한 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 개선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18년~’20년)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탈북민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 지자체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개편하고 탈북민 지원 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없이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탈북민에 준하여 지원 확대 - 탈북민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 		부처 제안 과제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직업역량 강화 및 탈북민 적합 일자리 지속 발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내실화 - 대상별 맞춤형 자립·자활 정착경로 지원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로 탈북민 자산형성을 지원 		부처 제안 과제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 거주지 초기 정착 지원 강화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 - 탈북여성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의료지원 행정 절차 개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착프로그램 -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포함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 	반영	통일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연계를 통한 탈북민 무료지원 서비스 확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p>○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 		
	<p>○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초기 적응교육 강화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 내실화 -일반학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력체제 활성화 등 종합 지원 체제 강화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탈북청소년 멘토링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 	<p>○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특별교육 등 지원 	반영	통일부
북한 인권	<p>○「북한인권법」에 따른 사업 등 북한인권 증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수집·기록 및 보존·관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법」의 안정적 시행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의 북한인권 공론화 활동 지원 	<p>○북한인권법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구 간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협력 제고,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력체제 구축 	반영	통일부, 법무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p> <p>▶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국제기구 북한지원 사업 공여 및 국제협력 추진 -당국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분배 투명성 고려 <p>▶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 -남북간 여건조성 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추진 -국제사회와 협력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추진 <p>▶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해결 노력 강화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 및 송환 등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조치	반영	통일부
	<p>○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인권이사회, 총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모멘텀 지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EU 등 유사 		부처 제안 과제	통일부, 외교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입장 국가들과의 공조 지속·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활동 지원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에 따른 국제적인 협력 활성화 			
	<p>○북한법과 통일이후 통합법제 심층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기본법과 교류협력법제 연구 -통일이후 통합법제 심층연구 -법률가들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부처 제안 과제	통일부 법무부
	<p>○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동유럽 등의 체제불법 청산 과정을 분석하여 피해자 복권 절차 등 ‘체제전환기 사법’ 확립 계획 구체화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동향을 분석, 통일대비 연구와 법령기초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정책도 포함 		부처 제안 과제	통일부 법무부

[국제인권규범 이행 및 국내외협력]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p>○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실종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진정절차에 관한 주요 의정서 등에 대한 비준 가능성 연구 및 검토 -‘유네스코 교육차별 철폐협약’ 가입 추진 -국내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비준 추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이행법률안을 정비하고 협약 비준을 추진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 철회	부분반영	법무부,
	<p>○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 철회 절차 진행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 철회	부분반영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p>○국제인권매커니즘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 방문조사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이행 보고서 작성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심의 준비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조사 대응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및 이행 과정에서 시민 사회 참여 확대	반영	외교부, 법무부, 여성 가족부, 보건 복지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p> <p>-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와 협의 절차 정례화</p> <p>-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이행 관련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협의 강화</p> <p>-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p> <p>-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게재</p> <p>-개인진정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검토</p>		부처 제안 과제	법무부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p>○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와 국제사회의 역할 강화</p> <p>-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활동 지속</p> <p>-유엔 인권협약 당사국 회의 참여</p>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와 국제사회의 역할 강화	반영	외교부
	<p>○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p> <p>-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적 기여 지속 확대</p>	○지역 및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p>부분반영</p> <p>-과제변경 : 아태지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 인권레짐이 구축되지 않음</p>	외교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p> <p>-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p> <p>-기부금품 모집 사업 확대 등 기부 활성화, 모집·사용 현황 상시 공개(1365기부포털)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추진</p>	<p>○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p> <p>○시민사회의 인권정책추진체계 참여 확대</p> <p>○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p>	<p>부분반영</p> <p>○시민사회의 인권정책추진체계 참여 확대 : 미반영(의견 없음)</p> <p>○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 미반영(의견 없음)</p>	행정안전부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	반영	행정안전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권단체 지원사업 지속 및 인권에 기반을 둔 지원사업 운영필요 -시민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	○ 시민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	미반영(기시행)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이미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동 권고는 불필요 ※ 환경부에서 SDGI행계획을 수립한 바, 이 내용을 추후 반영할 계획임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업인권]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기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및 교육홍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인권이행을 위해 기업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에 대한 기대를 표명 -경총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의 인권에 대한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신문, 인터넷, 소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에 대해 정부의 기대 표명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 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p>○기업과 인권정책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 인권적 측면 고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대책 마련 -정부는 UN기업과 인권이행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실시 -정부는 일정규모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마련 -인권경영 추진 모범적인 기업사례 발굴 및 홍보 <p>○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경영 	<p>○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 반영</p> <p>○기업과 인권정책 일반 :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제처 법령 검토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기업활동과 관련된 소관법령 중 인권적 측면을 고려할 법령은 거의 없음 -정부(산업부)가 기업 인권정책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상황, 인권위에서 인권경영 지침 등을 경제단체(경총 등)에 배포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홍보 추진 필요 <p>○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p>○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인권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관련 공무원 대상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등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총괄 사항으로, 인권위 등에서 추진 필요 <p>【외교부】</p>	산업부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정책선언, 실천점검의무를 시행하고 그 성과 공개</p> <p>-정부는 공공기관이 수출 관련하여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권장</p> <p>-정부는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장</p> <p>○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p> <p>-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정책대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마련</p> <p>-정부는 기업과 인권 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제공</p> <p>-정부는 기업과 인권 NAP의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p>	미반영(의견 없음)	
	<p>○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p> <p>- 「조달사업법」상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p>	<p>○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p> <p>-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p>	반영	조달청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신설에 따른 제도 정비</p> <p>-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침의 적극 적용</p>	<p>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 마련</p>		
	<p>○정부기반구제의 실효성 제고-NCP 운영 활성화</p> <p>-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NCP 위원 구성 운영절차 마련</p> <p>-NCP 기능 등에 대한 홍보 강화</p>	<p>○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p> <p>-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NCP 위원구성 운영절차 마련, NCP 기능 등에 대한 홍보 강화</p> <p>-정부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 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 마련</p>	<p>부분반영</p> <p>○집단소송제도 : 미반영(의견 없음)</p>	<p>산업통상 자원부</p>
	<p>○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활동</p> <p>-UN, WHO, ILO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활동 시 기업관련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p>	<p>○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활동</p> <p>-정부는 기업관련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참여 활동할 때 인권적 측면고려</p> <p>-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행 및 홍보하는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p>	<p>반영</p>	<p>외교부</p>
		<p>○분쟁지역에서의 기업의 인권존중 활동 지원</p> <p>-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을 고려하는</p>	<p>【산업통상자원부】 미반영</p> <p>-분쟁지역 광물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광물로 분류, 비 분쟁지역 광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대체하고 있음(과제</p>	<p>산업통상 자원부, 외교부</p>

권리	제3차 기본계획 초안	인권위 3차 권고안	제3차 NAP 초안 반영여부	부처
		<p>제도 및 절차 마련</p> <p>-정부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관한 OECD 실천 점검의무 안내서 등 분쟁지역 관련 국제기준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p> <p>-정부는 분쟁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p>	<p>해당없음)</p> <p>-일반 분쟁지역에 대한 기업 인권 관련, 인권위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외교부 등에서 지침에 대한 교육 등 필요</p>	
		<p>○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절차 지원 및 실효성 제고</p> <p>-정부는 개별 기업의 인권피해자를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p> <p>-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 절차가 설치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p> <p>-정부는 ILO 등 국제적 차원의 고충처리절차 홍보</p>	<p>미반영</p> <p>-고충처리절차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단위 고충처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별, 지역별 고충처리 절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p>	고용노동부